

“도로명주소 안내판 필 요한 곳 신청하세요”

- 연말까지 기초번호판 및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충남도는 도로명주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도로명판 2만 6,992개, 건물번호판 43만 3,236개 등 총 46만여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치위치 적정여부 훼손 및 누락여부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여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현황 등으로, 점검 결과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했다.

도는 일제점검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건물에 없는 장소나 버스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을, 교차로·이면도로·골목길에는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추가 설치해 정확한 주소찾기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도민들이 기존 안내시설이 훼손된 곳이나 추가 설치할 곳을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나 도로명주소팀(☎ 041-

635-2865)으로 알려주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새 주소체계”라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 주소 또는 찾고자 하는 주소는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27개 사업 신청

- 공동양식장 해상 종합 유통센터 瀾旣光린 건립
등 148억 원 규모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유출 피해 지역에 대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모두 27개 사업 148억 3,000만 원(지방비 포함 202억 9,400만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신청 사업은 지난해 9월 열린 제3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18개 사업 중 국가 시행 1개 사업을 뺀 17개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 10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면, 보령 ‘삼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3억 5,000만 원, 서산 '공동 양식어장 해상종합 쉼터' 2억 1,000만 원, 당진 '선착장 태양광 가로등 건립 사업' 1억 500만 원 등이다.

또 서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 조성' 3억 원, 홍성 '어사항 해상가두리 낚시터 조성' 2억 원, '상황리 세척장 시설 조성' 2억 원, 태안 '해녀 휴게실 조성' 7억 2,000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8억 7,100만 원, 어민회관 건립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서산 '공동수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 15억 원, 서천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 사업' 10억 6,600만원, 태안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10억 원, 태안 '안면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5,000만 원 등은 계속 사업으로 신청했다.

도는 이번 신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정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호응이 부족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예산까지 반영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제6회 유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된 20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고,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은 올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옛 관사촌, 문화·예술 공간으로

- 도, 대전시와 대부계약 체결...역사적 가치 보존·활용 힘쓰기로



충남도의 역사적 순결이 커커이 쌓인 '충남도 옛 관사촌'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관사촌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5월 14일 대전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도는 관사촌을 대전시에 5년간 무상 임대하고, 대전시는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도와 대전시는 또 계약서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관리 원칙과 의무 이행 등을 담아 관사촌 보호를 위해 힘 써 나가기로 약속했다.